

# 완벽한 5·18 진상규명 하고 서남권 조선산업 수리형 개편

## 민주당 지방선거 광주·전남 공약 뭐가 있나

각 정당들이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미래 비전 등을 담은 주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광주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각 정당들의 광주·전남 지역 주요 공약들을 3회에 걸쳐 신는다. 지역 유권자들이 주요 정당의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책 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6·13 지방선거 광주·전남 공약은 지난 대선 공약을 더욱 구체화하거나 변화한 지역산업 환경에 맞춰 제시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 공약의 경우 광주정신 고양과 친환경 경지동차산업, 문화산업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남 공약은 위기의 전남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조선산업과 관광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광주=민주당은 진보·개혁 세력의 본산인 광주의 공약으로 광주정신 계승사업 지속, 친환경자동차산도시 및 생산단지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지역특화 산업 육성, 광주형 일자리 혁신 상생모델 전국 확산 지원 등을 내놨다.

우선, 민주당은 광주정신 계승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 활동 실시 및 완벽한 5·18 진상 규명 ▲정부와 군 등이 보유한 5·18 관련 자료 폐기 금지법 제정 추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국가보고서 발간 및 포괄적 명예훼손법 도입을 통한 5·18 정신 훼손 및 명예훼손 시도 엄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 민주주의전당 건립 ▲국가폭력지우센터 건립 ▲민주인권평화 교육 및 문화 복합 공간 조성 등도 추가 대책으로 제시했다.

친환경자동차 산도시 및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 전장부품산업 기반 구축 ▲친환경 전기차·수소차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산업

## 5·18자료 폐기 금지법 추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연장 해조류 산업 클러스터 조성

생태계 및 실용화단지 구축 ▲친환경 청정 에너지 보급 및 전기차·수소차 산업기반 조성 등을 약속했다.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시아문화재단을 창의콘텐츠 플랫폼으로 조성 ▲5대 문화권 사업을 통한 도시 재생 및 관광산업 활성화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연장 등을 구체적 대책을 내놨다.

또 민주당은 광주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남구 도시첨단산단에 에너지신산업 산학연 혁신클러스터와 광주형 스마트에너지시티 실증단지를 구축해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광·의료통합 플랫폼 구축과 공기산업 클러스터조성 등으로 광융합·전자산업의 새로운 경쟁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산업복합단지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바이오 헬스산업 기반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 혁신상생 모델의 전국 확산 및 성공모델의 조기 창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민주당은 침체에 허덕이는 전

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남권에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및 해양치유단지를 조성하고 조선산업을 수리·개조형으로 특화·육성하기로 했다. 또 철도차량정비단을 유지하고 친환경 전남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6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우선, 김·미역·다시마 등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및 해양치유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또 위기에 빠진 조선산업을 수리·개조형으로 특화, 재육성하기 위해 해경 2정비장 유치 등을 통해 수리조선 특화산단을 조성하고 요트·호버크래프트 등 해양레저용 선박 특화로 중소형 조선산업 육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남해안철도와 전라선 고속철, 호남선 고속화에 따른 동력분산식 열차(Electric Multiple Unit) 철도차량정비단 유치를 공약했다. 친환경 농산물의 중심지인 전남을 위해서는 생산자·소비자·지자체가 참여하는 전남푸드플랜 위원회 설치, 전남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푸드플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재단을 분리, 전남관광공사를 설립하고 ▲전남 음식문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남도한시 전국망을 지원하는 한편 여행과 평생교육이 결합된 실버 여행학교 도입 등을 통해 6000만 관광객 유치를 공약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민주화정신의 완성을 위해 5·18 진상규명을 완벽하게 할 것”이라며 “또 친환경 수소차·전기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전과 연결된 에너지산업에 투자를 강화해 호남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 혁신상생 모델의 전국 확산 및 성공모델의 조기 창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민주당은 침체에 허덕이는 전



박원순·안철수 어색한 악수 부처님 오신 날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성평등 화장실 건립·암행어사 위촉 공직 감찰

### 광주·전남 지방선거 이색공약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을 앞두고 눈길을 끄는 이색 공약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약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광주·전남 지역정가에 따르면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는 성평등 화장실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남녀 간의 차이에도 동일한 면적을 사용하는 기존 화장실을 대신해 여성의 특성에 맞는 면적, 구조, 변기, 세면대를 적용해 생리컵 세척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윤민호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노조가 입찰을 10%에서 50%로 확대, 엄마와 아이를 위한 자치구별 마더센터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김삼호 민주당 광주광산구청장 후보는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

해 ‘시민 생활공약’을 공모해 구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 상임이사를 지낸 문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경험을 살려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자활복지 지원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병내 더불어민주당 남구정장 예비후보는 도농복합지역인 남구의 도시적 특성을 살려 도시농업을 늘리고 공영농장을 확대하는 ‘도시농업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광주 동구청장 선거에 나선 바른미래당 김영우 후보는 “출산·육아장려정책인 어린이 안전보행제도 도입을 통해 동구의 출산·육아를 지원하고, 고령화를 방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문태환 민주당평화당 광주시의원 후보(광산2)는 “IMF 시대에 직격탄을 맞고도 청년, 노인, 여성층에 밀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40~60대 중장년층을 위해 전국 최초 중장년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성모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는 최근 “군수에 당선되면 월급을 100원만 받겠다”고 공약했다. 군수 연봉은 9100만 원 수준이며 월 760만 원 상당이다.

허서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는 각 실과별 돈 쓰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직능별로 필자 마패를 지닌 암행어사를 위촉해 공직업무의 수시로 감찰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담은 공약이 나오는 것은 반갑지만 충분한 예산 검토 없이 무작정 발표되는 공약도 많아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광록기자 kroh@/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문대통령 개헌안 운명은?...내일 지나면 자동폐기

### 정의장·여당 24일 표결 추진

### 한국당 등 야권 철회 요구

### 표결 이뤄져도 가결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한이 임박했지만 사실상 자동 폐기 운명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은 공고 60일째인 오는 24일까지 국회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21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헌법 제130조 및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헌법개정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헌법 준수’를 앞세워 개헌안 표결을 강조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개헌안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일단 당일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려 개헌안이 표결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표결을 해보야 개헌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쉽지 않다.

현재 재적의원(288명) 기준으로 192명 이상(의결정족)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개헌안에 결사 반대하는 한국당 의석수만 해도 113석으로 개헌 지지선을 충족한다. 본회의가 열려도 의결정족수(192표)가 애초 미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118석), 그리고 역시 민주당의 뜻에 동조할 다른 정당 의원 일부만 출석

하고 한국당은 불출석하는 시나리오도 제시되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의 의무를 강조하며 표결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야권의 반발을 살 게 분명하다는 점에서 표결 없이 유감을 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표결 없이 24일을 넘기면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선 ‘사실상 바로 폐기’라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선 ‘계류 후 폐기’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개헌안이 계류되든 폐기되든, 25일 이후에는 표결이 불가능하다. ‘공고 후 60일 이내 의결’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24일까지 이번 정부개헌안이 가결되지 않은 채 이후 개헌이 재추진되기 위해선 국회 또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라는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우리가 꿈꾸는 내일, 투표로 실현하세요

# 6.13. 아름다운 선거

## 행복한 우리 동네

가슴 두근거리는 그 날,  
투표하세요!  
유월의 따뜻한 햇볕같이  
우리 동네 민주주의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6월 8일(금) ~ 6월 9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6월 1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